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규 열



한·일 양국간 군사기밀협정이 조인 1시간 전에 국적으로 유보됐다. 개인간 비즈니스도 아니고 평생이 국가간 협정을 1시간 전에 보류하니 참으로 '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드라마를 너무 봐서 그런지 극적인 것을 무척 좋아한다. 뭔가 꼬인 문제를 풀 때도 그냥 타결은 없다. '극적' 타결이 있을 뿐이다.

물론, 문제의 본질은 외교관례상 전례가 없는 1시간 전 유보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한·일간 군사협정은 외형적으로는 한·일간의 문제, 특히 우리 국민의 대입 정서상의 문제로 비춰지지만 그렇게 단순한 구조만은 아니다.

한반도의 군사, 외교적 현실은 한·일이 라든지, 한·중, 한·미식의 단선적 일차방정식의 차원을 벗어난 지 오래 임을 인식

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협정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국적으로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벌어진 외교적 협정을 보면 필자는 우리에게 과연 일본이란

일본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무엇인가라는 진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의 일본을 보며 내일의 우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우선, 가볍게 접근해 보자. 사업에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비즈니스 동향을 심심히 관찰한다. 5년 내지는 10년 후의 국내 동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은 그 시차가 좁혀졌을 뿐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의 커피 관련 시장을 지켜 보던 한 지인은 일찍이 한국에 커피 돌풍이 불거라고 예측했다. 국내 전문가

들이 시장의 포화를 이야기할 때도 여전히 수요는 있다는 전망을 자신 있게 내놓았다.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일본을 보면 알고 한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원조교제, 이자메, 환율이란, 소자화, 고독자, 베를 놓고, 잊어버린 10년 등등. 일본의 독특한 사회 혹은 경제적 현상이라며 열심히 우리 언론들이 소개했던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한동안 세간의 술 안주감이었다.

이제 이를 말하면서 일본 아이들의 꽤 된 집단성을, 환율이란을 말하면서 일본 여인네들의 안내심에 숨어있는 표독함을,

제안했다. 마침, 일본유학 경험이 있는 일본행정 전공 교수에게 일본에 지도를 부탁하자 그 교수로부터 일본에는 배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이유인즉, 한국의 행정, 교육 및 경제 정책 시스템 전반이 너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지 않아도 한국적 독창성이 빈약한 상황인데, 일본어까지 공부하게 되면 '번역 행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물론 다소 과장되고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정치를 제외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일본에 후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의 폭락 또한 일본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신봉하고 있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원산지는 당연히 일본이다. 그 신화의 핵심 동력은 토쿄 일국 중심의 입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일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현재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이상현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
(訴訟救助)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에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기 변호사조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사적으로는 소송구조, 형사적으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이들을 구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구조 또는 국선 변호를 진행하다 보면, 필자는 가끔 이러한 어려운 서민과는 동떨어진 소송인들을 마주하게 한다. 땅을 몇 필이나 소유하고 있거나 번듯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세금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대주는 소송구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런 때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

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듯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그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소송구조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법원의 구조명령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면 상대방이나 의뢰인 중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본인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

되는 소송구조를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최근 국민의 법 지식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지식의 인터넷을 통한 공유, '나 훔친 소송'을 통한 승소 사례의 출현, 변호사들에게 대한 불신과 선임회피 등의 현상도 찾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소송구조 등을 용인해주는 이유가 당사자 직접 소송의 경우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업무 가중을 우려해서인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국선변호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생기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자금력이 있거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뢰인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구조나 국선 변호인 선정에 있어 심사를 까다롭게 해 소송인 자력의 방법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가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 진행자들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자금력이 있는 의뢰인들은 본인의 힘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변호사>

요즘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의사마저도 의료 수가 저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거나 때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물론 또 하나의 전문직이라는 변호사 업계도 일부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1년에 겨우 수십 건도 수입하지 못하는 부의부 빈의부 현상이 찾아지 고 있다.

이처럼 어느 직업군이나 가릴 것 없이 생존 쌍수에 치열하게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고



이철호

승강기 '갇힘사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련된 설비인 만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명구조 활동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승강기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승강기 오작동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 불안, 승강기 갇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15일에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정전사태가 발생해 전국 시내 곳곳의 신호등 작동이 멈추고, 119 지령실에는 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전화벨에 울려 퍼졌다. 이날 엘리베이터에 갇힌 인원은 2095명, 1095건의 구조요청이 들어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도 전력수급이 여

률적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지난 21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을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정전 시 승강기 갇힘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최근 5년간 사용자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분석한 결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30.3%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에 승강기가 도입된 벌써 1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위에 열거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문명의 이기(利器)인 승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및 대처 요령으로는 첫째,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에는 질서를 지킨다. 둘째, 어린이나 노약자가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한다. 셋째, 승강기 안에 있는 조작 버튼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에는 문틈에 옷이나 물건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승강기의 고장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즉시 119에 혹은 승강기의 기관된 급구조요청 전화로 신고해야 하며, 비상벨을 통하여 외부에 현재 상황을 전파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최근 5년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도 일어난다. 따라서 전력 수급난이 부각되는 요즘 비교적 낮은 충인 3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실천하고 평소에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크고 작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및 대처 요령으로는 첫째,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에는 질서를 지킨다. 둘째, 어린이나 노약자가 먼저

락스 용기의 개선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락스가 뛰는 것은 액체를 쏟을 때 통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물이 출렁거리며 뛰기 때문에 그려는데 별도의 공기 구멍을 만들어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락스 희석액을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희석액을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는 세심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락스 용기에 안전장치 만들어 사고 예방해야

가정에서 '락스'라고 불리는 청소액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장실을 비롯해 집안 구석구석 청소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살균제이다.

하지만 이게 독한 살균소독제인데도 너무 허술하게 다루다 보니 가정에서 실수로 잘 뜯어내거나 눈에 들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례가 적잖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이 락스의 통 뚜껑을 열다가 액체가 뿌려сь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각막

눌러서는 절대로 액체를 뛰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 액체가 있는 부분의 짙은 포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야만 알약을 꺼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락스도 위나 독한 살균제이기 때문에 가정의 안전을 위해 그 끝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손상에 의해 결막염증과 시력 저하를 부르고, 락스와 세제를 섞으면 염소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유독가스는 폐렴이나 인후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동물복지형 축산 수익성 확보 우선돼야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내적인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통시스템 개선, 수익성 확보 등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에 따라 축산농가 10곳을 선정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주요 요인인 밀식사육에 있다고 보고 개선된 환경에서 길러 안전한 육을 거리를 공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복지형 축산이 뿌리 내리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축사 밀집도를 낮추고 동물운동장을 조성해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축산불 가격은 일반 농가와 별 차이가 없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현재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광주대 교수>

되는 소송구조를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최근 국민의 법 지식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지식의 인터넷을 통한 공유, '나 훔친 소송'을 통한 승소 사례의 출현, 변호사들에게 대한 불신과 선임회피 등의 현상도 찾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소송구조 등을 용인해주는 이유가 당사자 직접 소송의 경우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업무 가중을 우려해서인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국선변호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생기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자금력이 있거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뢰인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구조나 국선 변호인 선정에 있어 심사를 까다롭게 해 소송인 자력의 방법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가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 진행자들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자금력이 있는 의뢰인들은 본인의 힘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변호사>

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의원의 경우 검찰 구형 1년보다 1년을 더 높인 것이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무엇보다 불법 선거에 대한 엄연한 의지가 작용했다. 재판장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피, 눈물, 돈으로 얼룩진 대 대한 책임을 시행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통시스템 개선과 함께 판로를 개척해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만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형 축산이 뿌리 내리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축사 밀집도를 낮추고 동물운동장을 조성해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축산불 가격은 일반 농가와 별 차이가 없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현재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불법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실천 농가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셈이다.

법원이 이처럼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악자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어른의 반영이자 사회적으로 반영이 큰 사건에 대한 엄한 책임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형량은 엄연한 것에 의해 결정돼